

정황근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확대… 130억弗 달성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

물류비, 용자, 마케팅 등 지원 강화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 인프라 구축
정 장관 “농업, 수출전략 산업 육성”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우리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13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민·관 협의체인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본부장 정황근 장관)’ 출범식을 갖고 농업분야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K-푸드에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오름세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액은 116억 달러(농식품 88억달러, 연관산업 2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수출을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12% 증가한 130억 달러(농식품 100억달러, 연관산업 3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 물류비와 4600억원 규모의 수출 용자, 딸기·포도 등 10대 주력 수출 품목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한류와 한식을 연계한 해외 우수 한식당 20개소를 지정하고, 수출국입항부터 소비자까지 저온유통(콜드체인) 확대, 가루쌀과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유망품목을 발굴해 육성키로 했다.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한국형 시범온실(지능형농장)’을 구축하고 딸기 등 차별화된 품종을 연계해 수출을 확산한다. 농기계는 북미시장에서 제고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남미·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비료는 6000억원 규모의 원료 구입자금 용자 지원대상 원

료를 12개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수출 확대를 위한 4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투자대상을 농식품 이외에 지능형농장, 농기자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정황근 장관은 출범식 환영사에서 “농업도 충분히 수출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처럼, 올해도 대내외의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수출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추진본부장으로서 분기별 1회 이상, 실무 관계자들도 수시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고 수출업체와 협력과제 발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근본적으로 한계”… 경영·노동계, 개정안 마련 한 목소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토론회

실효성 논란… 시행 1년만에 존재 기로
전문가들 “산재예방 취지에 맞춰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처벌 중심의 기존 법 체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형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영계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전에 예방을 하지는 취지와 달리 산재 발생 후 처벌 중심으로 가다보니 법적 취지와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법이 돼 버렸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도 중대재해법의 접근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경영계는 실효성 없는 법으로 현장 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법 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정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산재 사망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중소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에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 중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법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도 “법 제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중대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정 추진으로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발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관 부처도 아닌데 경영계 로비만 받아들여 개악을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 자리에서 법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과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법 이행·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법을 보완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근거 마련

공정위 2023년 업무 추진 계획

지정기준 자산총액 기준 상향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에도 착수한다.

대형유통사가 중소 납품업체에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법도 마련키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간 합의 등 악용시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

호출자 금지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위 모든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지정 요건이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 위

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와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오는 3월부터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당사자간 합의 등 납품단가 적용 예외조항 등을 악용하는 경우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와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자부

에너지 기술개발 1.2조 투입

정부가 올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기술개발에 1조2065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1조1967억원) 대비 0.8% 증가한 1조206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 중 1159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규과제 예산의 88% 규모인 1024억원을 27일 공고하는 1차 연구개발과제(80건)를 통해 지원한다. 과기부와 의 다부처 사업인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20개 과제, 337억원)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